



N  
O  
R  
T  
H  
  
K  
O  
R  
E  
A  
N  
  
H  
U  
M  
A  
N  
  
R  
I  
G  
H  
T  
S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 북한인권

##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손기웅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현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한동호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 CONTENTS

제7권 1호 2012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2년 8월

발 행 2012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오름

전화 02-585-9122, 9123

<비매품>



##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11
- 3. NGO 13
- 4. 분석 및 평가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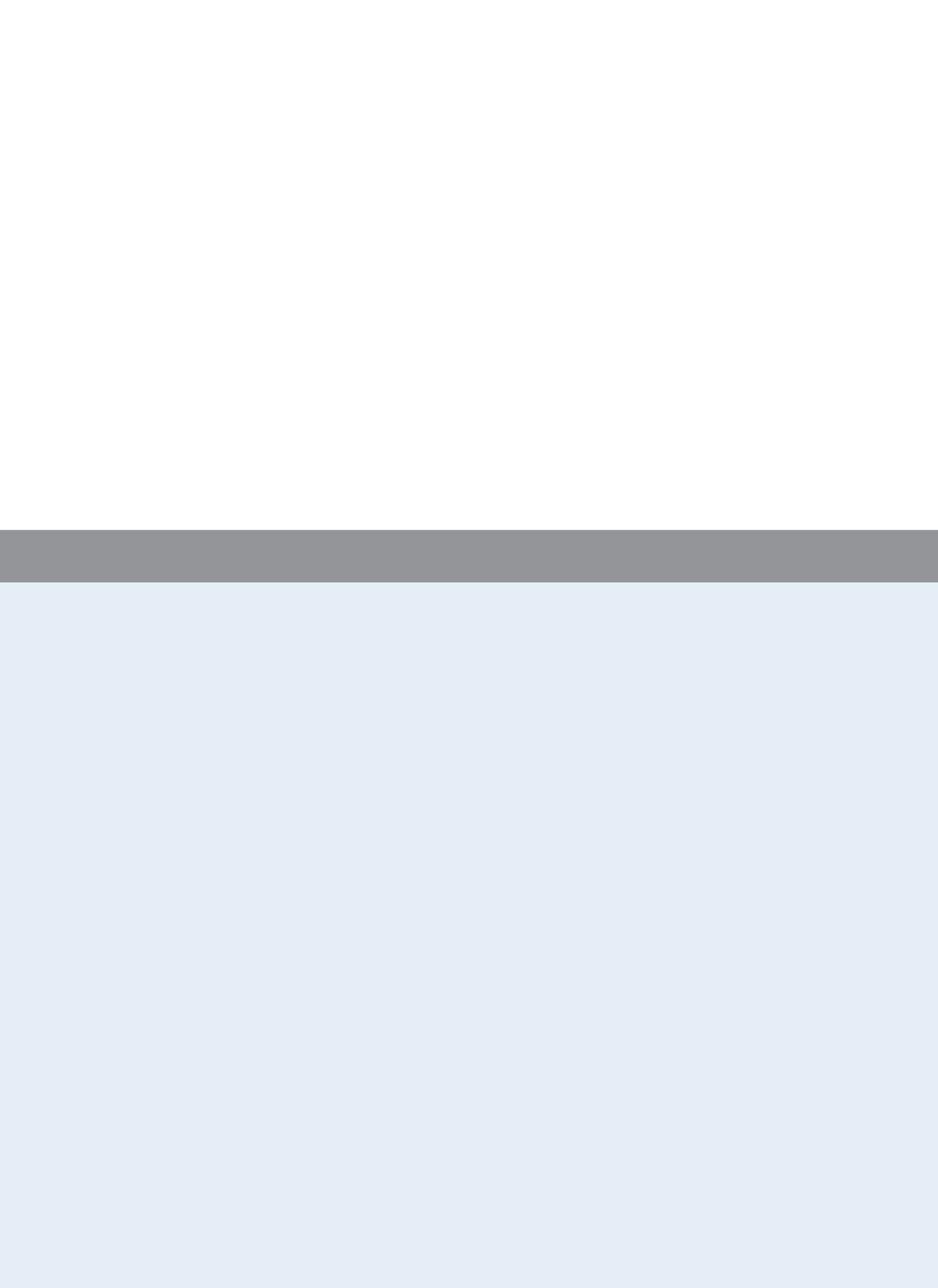
##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23
- 2. 일본에 대한 반응 24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5
- 4. 남한에 대한 반응 26
- 5. 분석 및 평가 28



##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33
- 2. 납북자 46
- 3. 국군포로 47
- 4. 이산가족 48
- 5. 분석 및 평가 50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11
3. NGO	13
4. 분석 및 평가	17



## 1. 개별국가

### 가. 미국

#### 〈미국 의회: 북한인권 청문회 및 결의안〉

#### 탈북자 복송 관련 청문회 개최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송 관련 청문회 개최(3.1),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의 탈북자 복송 관련 청문회 개최(3.5)
  - 수전 솔터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는 탈북자 한송화 씨, 조진혜 씨 등의 증언 청취
-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중국의 탈북자 송환 우려 표명(4.17)
  -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

#### 미국 하원, 탈북자 강제복송 반대 결의안 발의 및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통과

-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 등은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3.20)
  - 동 결의안에서 중국 당국은 국제난민보호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 복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 탈북자에 대한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
-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3.28)
  -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만장일치로 통과(5.15)
  -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평가
  - 특히 법안은 중국 당국에 대해 탈북자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

## 미국 상원,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DB화 추진

- 미 상원 법사위원장이인 패트릭 레이히(민주·버몬트) 의원이 5월 말 세출위에 제출한 '국무부 대외운영 및 관련 사업 예산 법안'에서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활용해 북한 내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DB 구축 추진(6.13)
  - 또한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중국내 탈북자 보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
  - 북한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896만 달러 이상을 지원토록 규정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19차 회기에 참석(3.12-13)
  - “북한 당국은 탈북자와 가족들에 대한 처벌과 감금을 중단해야한다”고 강조
  - 2011년 5월 방북 시 북한당국과 가진 인권 논의를 언급하며 인권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
  - 또한 북한 당국과 미 적십자사 사이에 이뤄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 유럽의회서 북한인권 설명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 북한인권상황소위에 출석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설명(5.29-31)
  -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
  -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구금, 고문, 실종, 정치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현재 13~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
  - 다만, 탈북자들의 20~30%가 외국의 라디오 방송을 들은 적이 있고, 절반 정도는 외국에서 들여온 DVD를 시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폐쇄적이던 북한사회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 북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 강조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통일연구원이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2회 ‘샤이오 인권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 내부로 정보유입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다”고 표명(6.14)
  - “보다 열린 정보환경은 북한 주민의 의식화에 이바지한다. 북한의 정보 봉쇄를 뚫는 것은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이라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 및 미 행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 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주한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개최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물어보세요’ 행사에서 북한 인권상황,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우려 표명(3.27)
  -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은 미국 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며 북·미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
  - 북한 내 정보자유 확산, 인권향상, 법치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표명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특별우려국 재지정

- 미국의 독립적인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12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버마 등 16개 나라를 종교 탄압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권고(3.28)

### 미 국무부,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 강조, 연례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 미 국무부는 ‘미·북 직접대화에서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정례브리핑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5.1)
- 미국은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매우 열악한(extremely poor) 상황”이라고 평가(5.24)
  - \* 2009년 보고서에서는 “열악하다(poor)”,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고 표현

### 미 국무부, 북한민주화 및 인권증진 예산 미배정

- 오바마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무부가 외국 원조에 사용하는 경제적지원펀드(ESF) 항목에 '북한' 관련 예상항목 미배정(6.13)
  - 국무부는 북한 민주화와 인권 증진 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250~350만 달러의 대북 ESF 자금을 배정했으나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별도 예산 미배정

### 미 국무부, 북한을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재지정

- 미 국무부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리비아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최악인 3등급(Tiers3) 국가로 분류(6.20)

## 나. 유럽연합

### 〈탈북자 복송 중지 촉구〉

#### 프랑스 하원, 북한 세미나 개최 및 탈북자 문제 논의

- 프랑스 하원은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소속 앙리 플라놀 하원의원 주최로 북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탈북자 강제 복송에 우려를 표명(3.16)

#### 유럽의회,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

-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북한정권의 인권 위반행위 즉각 중단,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김영환 등 북한인권운동가 4인에 대한 완전한 영사접견권과 변호인 면담 허용, 조속한 석방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탈북자 상황 결의안' 채택(5.24)
-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5.29)
  -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본부 김태진 대표가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
  - 신숙자씨 남편인 오길남 박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족의 송환 호소

### 〈유럽연합의 인권정책과 회원국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

####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공론화 주도(3.15)

#### 영국 정부 보고서, 북한 인권실태 악화 평가

-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정부 인권보호 사업에 대한 연례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악(worst)'으로 평가(4.30)
  - 전 세계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기금 예산을 150만 파운드(약 27억 원) 증액한다고 발표
  -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행사 때 자랑했던 북한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공개처형 등이 자행된다고 지적

#### 유럽연합, 인권외교 정책 강화

- 유럽연합은 모든 대외 정책에 인권을 연계하는 일련의 조치 채택(6.24)
  - 7월 초까지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EU Special Representative on Human Rights)를 임명
  - 대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에 민주화를 위한 기금을 제공하는 일명 유럽민주주의기금(European Endowment for Democracy)도 설립할 예정
  - 이러한 정책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심이 고조되는 계기로 작용될 가능성

## 다. 한국

### 〈이명박 대통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 강조〉

#### 탈북자 문제 해결 의지 표명

-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 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해결 의지 표명(3.12)

##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참관 필요성 제기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정보특위 공화당 의원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인권 침해 실태에 국제적 관심 필요성 제기(4.6)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국제인권단체의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

## 북한인권 개선의 시급성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 문제는 핵실험·미사일 발사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가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가 더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5.23)
- 이명박 대통령은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신속자 씨 문제를 거론하며 “세계가 관심을 가지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5.30)

## 〈정부와 의회의 탈북자 복송 중지 활동〉

### 외교통상부, 탈북자 관련 국제협약 준수 촉구

- 외교통상부는 중국 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을 강제로 복송하지 않도록 촉구(2.19)

###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공개 표명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모든 직접 관련국’이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2.27)

### 국회대표단, 탈북자 송환반대 활동 전개

-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제네바를 방문 중인 국회대표단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유럽본부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3.13-14)

## 국회대표단,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서한 전달

- 한국 국회대표단과 북한인권 단체 대표들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광장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서한을 전달(3.15)
  -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은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목사 등 북한인권단체 대표들이 14일 12시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힘.
-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에서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재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 발생

### 〈북한인권법 통과 운동 지속 전개〉

- 김성한 신임 외교통상부 2차관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3년 이상 계류시키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 표명(3.5)
-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KBS1 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3.14)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개선 활동 강화〉

#### 국가인권기본정책 권고안에 북한주민 보호 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되는 제2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 최초로 북한 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포함(1.4)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주년 보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개소 1주년 보고회를 통해 그 동안 접수된 북한 내 교화소에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 공개(3.15)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

-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1년간 접수한 인권침해 신고내용을 중

합한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5.3)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는 1년 동안 80여 건의 신고를 접수
-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증산·전거리 등 교화소 2곳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혹한 실상 수록
- 사례집 부록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278명의 명단도 수록

###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는 로스앤젤레스 UCLA 찰스영 도서관 컨퍼런스룸(Main Conference Room·Charles E. Young Research Library)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9회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5.14)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라종일 전 주영대사, 존 던컨 UCLA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비드 강 USC 한국학연구소장, 데이비드 호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산드라 페이 박사 등 미국의 학계, 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 라. 일본

###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강력 촉구〉

#### 일본 국가공안위원장, 일본인 납치피해자 구제 강력 천명

- 일본인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일본 국가공안위원장은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단파라디오 ‘자유북한방송’에서 녹음한 메시지에서 일본인 납치피해자를 “모든 수단을 써서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4.22)

#### 일본 납치 피해자 가족, 정부에 연내 문제 해결 촉구

-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중의원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이 올해 안으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6.1)

## 2. 유엔과 국제협력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정책변화 촉구 및 보고서 제출〉

#### 북한정책 변화 희망 표명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언론보도문을 통해 “최근의 북한 지도부 변화가 주민의 인권 등 전반적인 정책 변화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표명(1.12)

####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1년간 전개한 조사를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2.13)
  - 이산가족 사안, 식량 및 경제상황과 식량권에 대한 영향, 적법 절차, 사형제도, 사면조항, 외국인 납치, 오길남 사례, 비호신청인의 보호로 내용 구성

#### 북한인권 상황 및 탈북자에 대한 우려 표명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은 권력 승계를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세계의 신뢰를 얻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고 “리더십 교체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 절차를 채택하고 인권과 관련한 의문과 우려를 해소할 기회의 창(窓)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3.12)

#### 조사위원회 설립 검토 가능성 언급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위원회와 유대인 인권단체인 JBI가 워싱턴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국제 회의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 검토 방안의 하나로 유엔 조사위원회 등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4.10)

### 〈탈북자 강제복송에 대한 유엔의 우려 표명〉

#### 유엔 난민기구,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우려 표명

- 유엔 난민기구(UHCR)는 탈북자 24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 될 위기에 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이번 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탈북자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마련될 때까지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우선적으로 전달했다”고 공개(2.1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사무소(OHCHR), 유엔 인권이사회(UHRC) 등을 통해 관련 국가에 탈북자 문제가 난민과 관련한 국제법에 맞는 방향으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소개(3.14)

#### 유엔 인권최고대표, 탈북자 송환금지 공개 거론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 20차 회기 개최 연설을 통해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해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non-refoulement)’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주장(6.18)

### 〈유엔 인권이사회와 특별보고관의 활동〉

####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무투표 채택

- 유엔 인권이사회(UHRC)에서는 최초로 표결 없이 무투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3.23)
  - 결의안 표결 여부는 이사국 중 한 국가의 발의로 진행되는데, 금년의 경우 매년 표결을 신청하던 쿠바가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무투표로 채택
  - 무투표 합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쿠바 등 반대국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아니며 무투표 채택을 묵인하는 대신 결의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표명(dissociate)
  -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 1년 연장

##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신숙자씨 모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숙자 씨와 두 딸인 오혜원·오규원이 북한에 강제 구금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의 공식입장 공개(5.29)
- ICNK는 2011년 11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신숙자 씨 관련 청원서 제출
  - 임의적(강제)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신숙자 씨 사건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북한당국에 전달(3.1)
- 북한 당국은 동 실무그룹에 신숙자 씨가 간염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담은 공식 답변 제출(4.27)

## 3. NGO

### 〈정치범수용소 철폐와 반인도범죄 종식 활동〉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김정은에 공개서한 전달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영국과 프랑스, 태국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전달(1.8-9)
  - 동 편지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석방 등,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국내외 대북인권단체가 김정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반인륜 범죄 혐의로 스페인 국가법원에 고발(4.13)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유엔 실태조사 촉구 국제대회 개최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프레스센터에서 유엔이 정치범수용소 조사에 착수하도록 촉구하는 국제대회 개최(4.3)
  - ICNK는 국제사면위원회·휴먼라이츠워치·국제인권연맹 등 세계 3대 인권 단체들로 구성되었으며 탈북자 가족들 실태와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례, 정치범수용소

에 대한 국제법적 해설,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특별절차’를 활용한 북한인권 해결 방안 등을 모색

### 국제인권단체, 사면 때 정치범 포함 촉구

- 북한당국의 대사면 발표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정치범도 사면에 포함시키라고 촉구(1.12)
  -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대사면 발표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의문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라지브 나라얀 동·아태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사면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모와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 독·한 협회, 북한 정치범수용소 고발 행사 개최

- 1966년 한국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독·한 협회는 아데나워재단의 후원 아래 한 달 일정으로 아데나워재단 교육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진·그림 전시회’를 개최(1.15)

### 북한인권위원회,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보고서 발표

-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C)는 전 수감자 및 경비대원 60명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고발하는 ‘숨겨진 강제노동수용소’ 발표(4.10)
  -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1950년대 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인 ‘굴라그(Gulag)’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 15~20만 명이 감금돼 있다고 추정하면서 위성사진도 공개

###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 북한정치범수용소해체본부(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초청으로 프랑스로부터 북한대사관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북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 개최(4.15)

### 〈국제인권NGO의 열악한 북한인권 실상 고발〉

#### 프리덤하우스, 북한을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분류

-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12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없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평가(1.19)
  - 북한은 정치적, 시민적 자유 모두 최하위 등급인 7점으로 평가
- 프리덤하우스의 ‘2012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언론자유 점수는 97점으로 전 세계 197개국 가운데 최악을 기록(5.2)

#### 휴먼라이츠워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휴먼라이츠워치는 ‘2012년 연례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조직적으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1.22)
  - 북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종교,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 불법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이 행해지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집단처벌이란 부당한 이유로 갇혀 있다고 비판

####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약탈자’ 명단 발표

-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세계 최악의 ‘언론약탈자’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명단에 포함(5.3)

###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캠페인 전개〉

#### 북한자유연합, 시진핑에 복송 중단 호소

- 북한자유연합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에게 중국이 탈북자 강제복송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의 서한발송(2.12)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 주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복송 항의 시위 개최

-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간토(關東)지방 탈북자협력회 등 일본 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는 도쿄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시위 개최(3.8)

### 인권NGO,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서밋 회의' 개최

- 휴먼라이츠워치, 북한인권시민연대 등 20여 개 인권 관련 NGO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송환 중단 조치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3.13)

### 재영국 한인 단체, 탈북자 강제송환 규탄 시위

- 재영조선인협회와 재향군인회 영국지회 등 단체 회원 20여 명은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검거 활동 및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 개최(3.15)

### 한국 사회 지도층 105인, 탈북자 구출 네트워크 결성

- 탈북자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연합체인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탈북난민과 함께하는 사람들 105인'을 결성(3.19)
  - 이를 통해 강제복송 중지 및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1천만 명 서명으로 전 국민운동 전개

### 제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

- 서울평화상 수상자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잭 렌들러 전 미국 북한인권위원장 등 미 대표단과 국내 인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4.22-5.1)
  -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세미나, 탈북단체장들의 청와대 방문, 생명과 인권을 위한 토크콘서트, 대북전단 날리기,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영화 제작보고회 등의 행사 진행

## 4. 분석 및 평가

###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속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서, 공개 발언 등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지속 표명
- 미국과 영국은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탄압국으로 지속적으로 분류
  - 특히 미국은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지극히 열악’하다고 평가
  - 북한을 종교자유 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하고 인신매매 최하위등급(Tires 3)으로 재분류
-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프리덤하우스 등 국제인권NGO들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Hidden Gulag’, ‘Seongbun’ 등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 평가
  - 프리덤하우스는 최악 언론탄압국,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약탈자로 규정하는 등 북한 내 정보 유통과 언론 자유에 대해 비판

###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지지 국가 증가 추세

- 금년도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 없이 무투표로 채택
  -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찬성 국가가 증가하고 반대 및 기권국가가 감소하여 왔는데, 올해 결의안이 무투표로 채택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찬성표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결과
- 특히 매년 표결을 신청하던 쿠바가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무투표로 채택되는 것을 목인
  - 이는 중국, 러시아, 쿠바 등이 결의안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였다기 보다는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결과

### 외교정책에서 북한인권 중시 및 연계 전략 강조

- 이명박 대통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문제

해결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

- 미국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핵, 미사일 위주의 대북접근과 함께 보다 본질적인 인권, 민생 차원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전략으로 전환 시도

###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 유럽연합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그동안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데, 유럽연합인권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유럽민주주의기금을 설치할 예정인바, 앞으로 유럽연합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의회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탈북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개선 활동 강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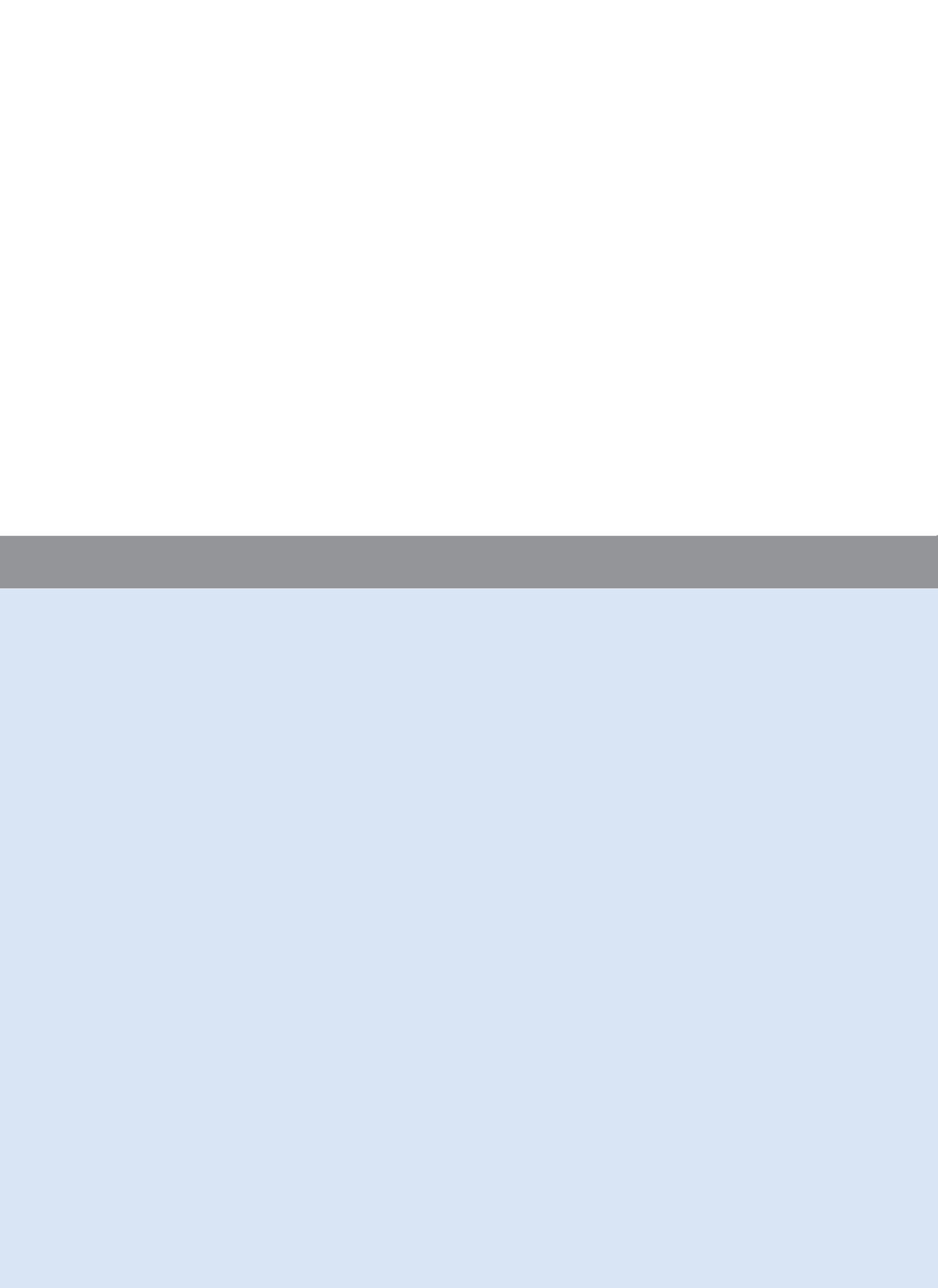
###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공론화 및 시위 활동 확산

- 금년 초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송환을 강행하면서 일회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로 하여금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 확산
- 국내적으로 국회의원, 국내외 연예인, 북한인권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 지속 개최  
- 특히 유럽 등 다른 국가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 확산
- 유럽의회와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유럽의회는 강제복송 중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유엔 사무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

### 국제연대 활동을 통한 반인도범죄 종식 활동 확산

-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인권단체들이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

- ICNK가 신속자 씨 모녀 문제를 유엔 특별절차인 '임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청원하였고 동 실무그룹이 북한당국에 보낸 서한에 대해 북한이 이전과 달리 공식적으로 답변
- 이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인권NGO가 동참하는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당국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반증
- 북한 정치범수용소 인권유린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활동 확산
-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인권 유린 실상을 고발하는 활동 강화
  -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국제행사 개최
- 특히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유린에 대한 최고 통치자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
  - ICNK는 영국과 프랑스, 태국 등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대표부에 김정은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모든 북한 주민들을 석방하는 등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김정은을 직접적으로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거론하는 활동 전개
  - 스페인 법정에 김정은을 고발하는 활동 전개
- 해외 주재 북한대사관에 항의 서신을 전달하는 등 해외에서 북한대사관을 대상으로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 전개





1. 미국에 대한 반응	23
2. 일본에 대한 반응	24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5
4. 남한에 대한 반응	26
5. 분석 및 평가	28



## 1. 미국에 대한 반응

### 조선중앙통신 등, 미군재판소 무죄판결 비난

- ‘미군재판소의 이라크파병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무죄석방 판결과 관련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대한 난폭한 위반행위라고 주장(2.22,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미군재판소가 이라크 주둔 미 해병대원들의 민간인학살범죄에 대해 무죄 석방판결을 내린 것을 비난하며 “하디타 참변을 초래한 범죄자들은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2.24, 평양방송)
- 미국의 해외 비밀감옥장소와 수감자 이송자료들 공개 관련 ‘비밀감옥운영 문제는 국가적 조직범죄이며 ‘은 세계 앞에 공개 및 인류양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4.23,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조선중앙방송)

### 북한, 미 식량지원 중단에 반발, 핵사찰 거부 표명

-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북미 합의사항인 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4.16, 요미우리)
  - 북한은 미국의 식량지원 중단을 구실로 '미국 쪽에서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
- 북한은 지난 2월 미국의 식량 지원과 IAEA 감시하의 북한 우라늄 농축 중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북미 합의를 채택

### 북한 외무성, 미국이 발간한 인권보고서 내용 비난

-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1년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5.29,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인권문제를 세계 지배 전략 실현의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은 미국의 고질적인 악습”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당연히 매해 고정대상으로 올라 있다”고 강조
  - 대변인은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며 한 나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 인권유린행위”라며 “미국이 행동

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내부를 어찌 보려는 어리석은 심리전 기도”라고 비난

-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인신매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릴수록 그에 대처한 자위적 억제력을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위협(6.25,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북제재는 침략·약탈 수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비망록을 발표(6.20)
  - 조국전선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제재책동 진상과 악랄성, 비열성을 만천하에 발가놓고 규탄하기 위해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약탈, 지배와 간섭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
  -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책동에 가담해 가장 악질적으로 날뛰는 것은 이명박 역적패당”이라며 “이명박 패당은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제재책동에 적극 추종해 돈줄이니 군사전용이니 뭐니 하면서 북남교류를 차단해버렸다”고 비난

## 2. 일본에 대한 반응

### 북·일 교섭담당 대사, 북송 일본인 처우 문제 협의 및 일본인 유골 반환 제안

- 북한이 일본에 피랍자 문제를 유보하고 북송 일본인 처우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3.18, NHK방송,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3월 17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일본 측 관계자와 접촉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견해를 표명
- 또한 북한은 일본에 2차 세계대전 전후 남겨진 일본인의 유골 반환을 제안(4.20, 교도통신)
  -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한 일본 방북단에 이런 의향을 표명

- 2차 세계대전 전후 북한에 남았다 숨진 일본인 유골 반환 문제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작년 11월, 북한 측과 극비 접촉해 수집과 반환을 요청

### 조선중앙통신, “일본 북한인권 부각은 과거청산 회피 의도”

-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북 인권 탄압 개탄’ 결의안을 상정한 일본을 강하게 비난(3.28)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너절하고 고약한 행위’란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납치문제를 구실로 우리의 인권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려는 데는 조일관계의 기본이 마치 납치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과거청산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깔려있다”고 주장
  - 논평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인권 타령은 저들의 불미한 과거와 현재의 인권유린행위를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고 주장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 북한 외무성, “탈북자 ‘난민’ 용어 받아들일 수 없다”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탈북자 상황을 우려한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지적에 북한이 ‘난민’이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3.4)
  - 마리아 오테로 미 국무부 시민 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제3국 내 탈북자 상황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장일운 북한 외무성 과장은 “난민이란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

### 북한 외무성, “유엔 북한인권 결의 단호히 배격”

- 북한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를 전면 배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적대세력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19차 회의에서 해마다

별이는 상투적인 반공화국 ‘결의’ 채택놀음을 되풀이했다”며 “적대세력들의 역겨운 광대놀음의 산물인 반공화국 결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단호히 전면 배격 한다”고 언급

## 4. 남한에 대한 반응

### 조선중앙통신,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이행 및 5·24 조치 철회 촉구

- 통일부의 이산가족상봉 해결노력을 “선거표를 노린 생색내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색하는 기만극”(2.24), “민심을 오도하기 위한 교활한 기만술책, 유치한 말장난”이라 비난하면서 남북선언들 고수 및 5·24조치 철회를 주장
  - “이명박 패당이 진정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북과 남의 온 겨레 앞에 공식사죄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2.24)
  -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상봉과, 북남간 어떤 대화와 협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2.12, 우리민족끼리)
- 남한이 한쪽으로는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를 떠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5·24조치 고수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진실로 상봉과 교류를 바란다면 국방위 정책국 공개 질문장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2.18)

### 우리민족끼리, 탈북자 송환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국경지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로부터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응당한 의무”라며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인접 국가들이 자국법과 해당협약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으로써 누가 가타부타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2.24)
  - “최근 남조선 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 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탈북자 송환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무모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
- 통일부·외교통상부·보수단체 등이 탈북자 북송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파산에 직면한 남북대결정책을 강행하며, 총선에서 심

판분위기를 역전시켜 보려는데 있다”고 왜곡 주장(3.6)

## 북한 외무성, 남한의 ‘탈북자 국제쟁점화’ 비난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저주와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케케묵은 ‘탈북자소동에 또 다시 매여달리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탈북자 문제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기를 “동족대결을 국제화하고 있다”고 비난(3.13, 조선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탈북자 대응에 대해 “조선반도와 지역에 친선과 협조, 대화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막고 대결과 충돌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하려는 최후발악”이라며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 흐름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
  - 남한 정부가 탈북자를 “차별과 냉대, 반복대결, 선거용으로 이용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여론화·국제화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3.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 탈북자 언론매체 맹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탈북자 인터넷신문 「뉴포커스」의 대표를 ‘너절한 인간추물’, ‘반통일과 동족대결의 돌격대’,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주역’으로 비난(3.19, 3.21)
  - “놈이 앞으로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 속에 천벌을 받고 황장엽과 같은 비명횡사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면서 대표를 공개적으로 헐박

## 조국통일연구원, 탈북자 인권 비판에 ‘탈남자 50만’ 맞대응

- 북한 조국통일연구원은 백서에서 “최근 남조선과 해외에서 괴뢰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의 산물인 탈남자들의 비참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5.10, 조선중앙통신)
  - 탈남자란 “남조선에서 더는 살 수 없어 정든 제 고향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규정하면서
  - 탈남자 수가 현재 50만 명 이상이고,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00만여 명이 된다고 주장

###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비난

-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누리당 등 '북한인권법'의 19대 국회 상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도발,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 인권법 조작으로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에 대한 책임은 보수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 언동(6.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사상과 제도 불인정, 동족에 대한 전면대결을 공식 선포하는 행위"라고 거듭 비난(6.20, 조선중앙통신)

## 5. 분석 및 평가

###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상투적으로 대응

- 미국과 일본의 북한 인권실태 발표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대응 조치로 협박
  - 미국의 '2011 인권보고서'와 '인신매매보고서'를 북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자위적 언급
  - 일본의 '북 인권 탄압 개탄' 결의안 상정을 일본이 자행한 인권유린행위를 가리기 위한 기도라 주장
  -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복 결의로 전면 배격
-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사안마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문제 확산의 차단 기도

### 북한, 미국의 북핵문제와 식량지원 연계 거부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식량지원의 중단을 밝히자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거부
  -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발사와
  - 미국의 식량 지원과 IAEA 감시하의 북한 우라늄 농축 중단,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2월의 북·미 합의는 무관하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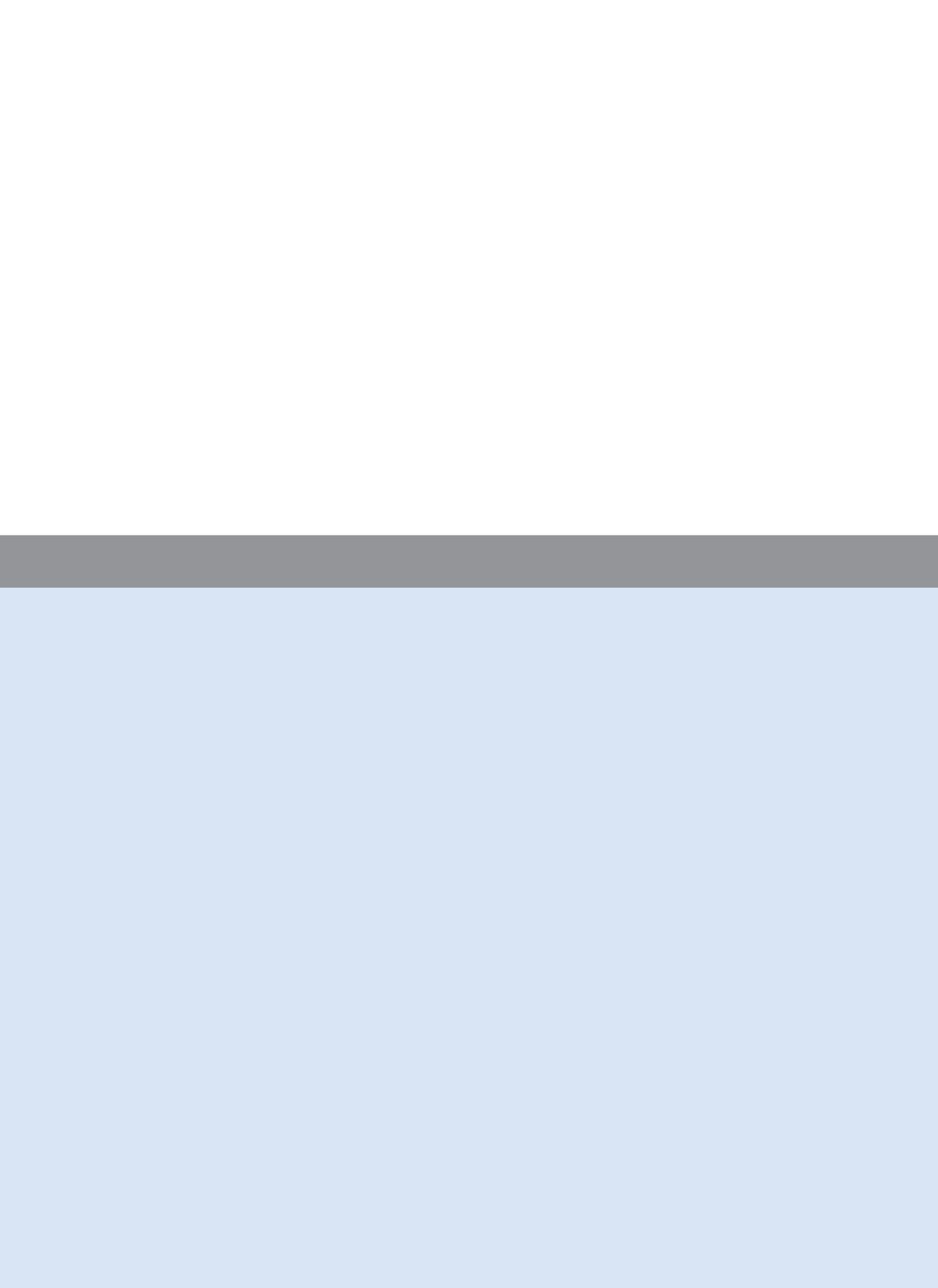
- 미국이 먼저 북·미 합의를 깬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추가 핵실험에 대한 정당화 논리 축적
  - 동시에 북·미 합의를 고리로 대북 식량지원 희망

### 북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 맹비난

- 북한은 한국 정부, 국회 및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개선 노력을 강력하게 비난
  - 탈북자 북송 반대를 반북대결정책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제정 움직임을 동족에 대한 전면대결로 공식 선포
  - 「뉴포커스」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탈북자 매체를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주역으로 비난
- 탈북자의 북송을 주권국가의 정당한 활동이라 주장하면서 북·중 협력에 의한 강제송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북한 대내적으로는 탈남자를 강조하면서 체제우위 선전을 지속
  -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이를 반대하는 국내 정치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 예상

###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이산가족상봉 난항 예상

- 이산가족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5·24조치의 철회를 주장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이산가족상봉의 재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북한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과 연계될 때는 응할 것으로 예상



##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33
2. 납북자	46
3. 국군포로	47
4. 이산가족	48
5. 분석 및 평가	50



## 1. 탈북자

### 〈단속강화로 인한 탈북자 국내 입국 규모 감소〉

#### 김정은, ‘탈북자 단속’ 엄명

- 산케이신문은 김정은이 직할 치안부대에 탈북자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엄명을 내렸다고 보도(1.4)

#### 북한, 김정일 애도 기간 귀환 탈북자 ‘선처’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 사망 애도기간에 복귀한 장기 실종자들에 한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특별조치를 취했다고 보도(1.12)

#### 2월 대사령 조치, 탈북자 대거 포함

-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월 5일 정령으로 발표한 대사령(대사면) 조치에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이후 체포된 탈북자와 탈북 시도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1.20)
  - 대사령 대상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 제한했으나,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

#### 북한 군대, 밀수꾼 가장 탈북자 체포

- 열린북한방송은 북·중 간 국경 통제 강화 방침에 따라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밀수꾼으로 가장해 중국에서 탈북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보도(1.26)
  - 북·중 공조 체제는 중국 공안부장의 북한 방문(2011.2.13)시 탈북자 관리 및 변경지역 치안강화와 범죄척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합의 후 크게 강화

#### 김정은, ‘탈북자와의 전쟁’ 지시문 하달

- 북한은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탈북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2.8)

-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탈북자에 대해 “탈북자는 3족을 멸하라”, “탈북 시도 북한주민에 발포, 사살허가” 등의 조치와 함께 12월 31일 외화사용 전면금지를 내걸어 탈북자의 북한 내 송금을 차단

### 북한, ‘탈북자 현장 처형’ 주민 강연

- 데일리NK는 북한 당국이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김정일 유혼을 관찰하는 것이라는 북한 내부 문건(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2012년 1월에 제작한 ‘국경연선지대를 강화하고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위엄을 떨치자’는 제목의 문건)을 보도(2.8)

### 북한, 국경지역 탈북자대상 총기사용 금지령

- ‘좋은벗들’은 ‘오늘의 북한소식’을 통해 북한 중앙당이 국경을 통해 탈북하는 주민들에게 총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보안당국과 군부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2.9)

### 북한, 감시카메라 설치 증대

- 최근 북한 당국은 국가안전보위부 주도 하에 국경지대 주요 탈북 경로에 감시카메라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2.13)

### 북한, 탈북자 체포조 중국 압약

- 탈북난민인권연합은 북한이 1월 25일 국가안전보위부와 경찰총국 소속 탈북자 검거 요원 2,000명을 대거 중국에 보냈다고 전함(2.16)
  - 파견요원은 역대 최대 규모로 김정은의 지시라기보다는 김정은 등장 이후 보안기 관별 충성경쟁이 낳은 결과로서, 탈북자로 위장해 2인 1조로 활동

### 탈북자 스파이, 탈북자 정보 거래

-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일부 탈북자들이 북한 접경지대에서 중국 공안에 고용돼 탈북자 색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주장(2.27)
  - 중국 엔지와 창춘, 선영 등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처럼 속여 탈북자 무리에

가담한 뒤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고 신원과 위치 거래

### 중국, 탈북 31명 전원 복송

- 중국에게 탈북자 강제 복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대량 체포한 탈북자 31명을 북한에게 호송해준 것으로 알려짐(3.9)
  - 이들은 2월 8~12일에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람들로 상당수가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으며 다섯 살짜리 어린이를 포함한 미성년자와 노인이 포함

### 북한, ‘한국국적 탈북자’ 납치 처형

- 동아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비밀요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을 납치해 처형하고 있다고 보도(3.14)
  - NK지식인연대는 “지난해에만 북-중 국경에서 북한 보위부와 군 소속 정보기관인 보위사령부, 국경경비대의 합동 작전에 걸려 납치된 탈북자 출신 한국인이 15명 정도”라고 주장

### 몽골-중국 국경서 탈북자 10명 체포

-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지 탈북자 지원가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몽골과 중국 국경지역 등지에서 탈북자 13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보도(3.16)
  - 지난 1월 몽골-중국 국경지역에서 탈북자 10명과 2월 중순에는 중국 허난성(하남성)에서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발표

### 북한, ‘탈북자 납치’동영상 조작

- 북한 대남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3.27) 약 7분 분량의 탈북자 관련 동영상이 조작(3.30)
  - 탈북자들이 한국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하게 구타당하고, 심지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보도

### 통일부, 1분기 탈북자 입국 전년比 급감

- 통일부는 8일 올해 1분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366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566명)보다 200명이나 줄어든 수치(5.8)
  - 월별로는 1월 160명(남 61명, 여 99명), 2월 90명(남 26명, 여 64명), 3월 116명(남 32명, 여 84명)으로 67.5%가 여성인 것으로 집계

### 중국, 연변지역에서 5개월간 탈북자 특별단속

-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라디오방송망(中國廣播網) 등에 따르면, 탈북자가 많은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가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3비(非) 외국인'을 대상으로 5개월(5.15~10.15) 간 특별단속 했다고 보도(5.25)

### 북한, 국내 탈북자단체 감시

- 국가안전보위부는 4월 말 국경연선지역을 모두 국가안전보위부의 관할로 편재하고 국경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남한의 탈북자 단체들을 주요 투쟁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6.5)
  - 북한 당국은 남한 탈북자 단체들이 주축이 돼 전국 주요 사적지의 동상과 건물들을 폭파하려고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몇 곳에서 관련자들을 검거

### 중국, 탈북자 브로커 조사 강화

- 북한 정부가 탈북자 도강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탈북자 브로커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6.5)
  -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집에 재웠거나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들은 5천 위안에서 2만 위안 상당의 벌금을 부과, 인신매매 가담자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7년까지 실형 부과

### 베트남 공안, 탈북자 지원 한국인 체포

- 호찌민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최근 베트남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한국인 유 모씨(51)가 공안에 체포됐다고 보도(6.24)
  - 지난 2004년 7월에도 탈북자 400여 명의 한국행을 주선하다 추방됐으며, 최근에도 라오스 등지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보도

### 〈탈북자 강제복송금지 캠페인 확산〉

#### 탈북자 단체, 강화군에서 초코파이 풍선 시도

- 탈북자동지회,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탈북자단체 회원 20여 명이 설을 앞두고 인천시 강화군에서 초코파이 100kg을 대형풍선 20개에 나눠 담아 북으로 전달(1.20)

#### 김정일 애도기간 후 탈북자 중국 유입 증가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본 민간단체를 인용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애도 기간에 거의 사라졌던 북한 주민의 탈북이 최근 늘었다고 보도(1.23)
  - 북조선난민구원기금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애도 기간에는 탈북자를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다시 중국으로 탈출

#### 뉴데일리, 중국 내 탈북여성 출산아동 10만 명 추정

- 뉴데일리는 중국남성과 북한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검은 아이들’로 지칭하면서, 북한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중국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무국적 고아들이 10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2.2)

#### 탈북자 단체, 김정일 생일 대북전단 살포

- 탈북자 단체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로 계획(2.13)
  -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고 개혁·개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단 20만 장과 미화 1달러, 지폐 1천 장, 북한의 인권실태 등을 담은 DVD 500개,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소개한 소책자 300권 등을 대형 비닐 풍선 10개에 실어 전달

#### 중국내 탈북자 24명 복송위기

-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24명이 송환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이들 중 10명은 중국 공안에 억류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중 북한인권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2.14)

### 박선영, 탈북자 3명 중국 체포 확인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 3명이 18일 밤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고 주장(2.19)
  - 한국에 딸이 있는 60대 탈북 여성 1명과 또 다른 여성 1명, 남성 1명

### 탈북자 처리 관련 한·중 입장차이

- 주중 한국대사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인식차가 크다”면서, “중국은 탈북자가 경제적 원인에 의한 불법월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2.20)
  - 북·중 간 체결된 탈북자 처리에 대한 조약이 불법월경자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탈북자의 강제 복송 중단 요구 관련 “중국은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

### 중국, 탈북자 9명 복송

-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0여 명의 강제복송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 접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옌지에서 체포한 탈북자 9명을 지난 주말 복송한 것으로 확인(2.23)
  -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시도한 탈북자 브로커 강옥순(가명·47)씨는 “며칠 전까지 옌지에서 잡힌 9명이 룡징 변방부대에 갇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들이 아마 북한으로 넘겨진 것 같다”고 주장

### 중국, 탈북자 ‘경제목적 월경자’ 재확인

-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2.28)
  - “중국의 사법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불법 월경자(를 돕는) 조직과 월경 행위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

###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탈북동포 강제 복송 중단’ 촉구

-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중국에 감금된 탈북 동포들의 강제 복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3.5)

### ‘탈북자 북송저지’ 시민사회 연대기구 출범

- 북한인권단체연합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500여 개 시민단체는 5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 출범을 선언(3.5)

### 중국지식인들, 탈북자 송환 반대

- 중국 외교부가 탈북자에 대해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중국 인터넷에서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다룰 것을 호소하면서 강제 송환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으며 한 네티즌이 게재한 탈북자 송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가 반대 의사 표명(3.6)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탈북자 송환 중단’ 성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국 정부는 보편적 인권존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3.6)
  - 통일협회 명의의 성명에서 “중국은 198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박선영, 북송위기 탈북자 48명, 중국 억류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 위기에 몰린 탈북자는 생후 1개월된 영아를 포함 48명에 이른다고 주장(3.8)

### 아시아기자협회, “중, 탈북자들 난민 인정 촉구”

- 한국·일본·중국·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 기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아시아기자협회(AIA)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3.8)

### 반기문 유엔 총장, “탈북자 문제, 깊은 우려 공유”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외교통상부장관과 비공개 오찬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 “한국 정부와 깊은 우려를 공유한다”고 언급(3.9)

### 통일부 장관, “탈북, 북 체제 탓”

-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박해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도록 하는 북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3.9)
  - 중국 내 탈북자 북송 논란을 언급하며 “1차적 책임을 그(북한) 체제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

### 북한 억류 미 기자, “탈북 북송 반대”

-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는 중국계 미국 방송 기자 로라링 씨가 국제 사회에 탈북자 강제 북한 송환을 막아달라는 영상 메시지 전달(3.9)
  - 링크(LINK)가 제작한 영상 메시지에서 로라링 씨는 “북한 억류는 내 생애 가장 끔찍했던 기억”이라며 “지금 북송될 처지에 있는 탈북자 30여 명도 북한에 돌아가면 공포 속에서 고문을 받거나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강조

### 재일대한민국민단, 주일중국대사관 항의집회

- 재일대한민국민단이 주일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탈북자 강제 송환 즉각 중단과 정착희망국 이송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주일 중국대사관측에 전달(3.13)

### 울산시 의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추진

- 울산시 의회는 14~23일 제144회 임시회에서 ‘북한이탈 주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이번 임시회 채택을 추진하며 중국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가 중국이 탈북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3.14)

### 보수단체, 수원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집회

- 광복회, 전물균경유족회 등 9개 보수단체 회원 500여 명은 수원역 앞 광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촛불집회를 가지고 “중국정부는 사인행위와 다름없는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3.14)

## 충남도의회, 중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등 촉구

- 충남도의회가 제2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3.16)

## 캄보디아한인회, ‘탈북자 다큐DVD’ 무료 배포

- 탈북자 강제송환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캄보디아 한인회가 EBS 다큐 프라임이 제작한 탈북과정을 담은 ‘천국의 국경을 넘다’ 두 번째 이야기와 영국 BBC방송이 탈북문제를 다룬 30분짜리 특집다큐멘터리(제목: Korea, Out of the north)DVD 배포(3.21)
  - 각각 5백여 장을 만들어, 수도 프놈펜 소재 한인교회, 학교, 교민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으며 자막 없이 영어로 제작된 BBC 다큐영상물은 주로 서양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메콩강변 노천 카페거리에서 무료 배포

## 중국 내 한국공관 체류 탈북자 국내입국

- 중국 내 한국공관에 장기 체류하던 탈북자 11명 중 4명이 2일 입국함에 따라 국군 포로 가족을 포함한 나머지 7명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도(4.5)
  - 한·중 양국은 공관에 장기 체류 중이던 탈북자 중 국군포로의 가족과 미성년자를 우선 한국에 보내되 나머지 체류자도 4월 말까지 모두 한국행에 합의

## 탈북여성, “정치인들, 북송문제 관심 촉구 시위”

- 탈북자 정미옥(가명·43) 씨와 김미경(가명·53) 씨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3월 17일부터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정치인들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시위를 지속(4.12)
  - 정 씨는 “탈북자 문제에 정치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고 언급

## 북한인권시민연합, 강제북송 위기 탈북자 구출

-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탈북여성 6명이 최근 중국을 벗어나 제3국 안전지대에 도착했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난민구호사업단이 주장(5.9)
  - 4월부터 어린이 3명, 여성 8명 등 총 11명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강제북송 등의 곤

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입수한 후 구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개 모금

### 미얀마 탈북자, 조기 국내입국

- 청와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얀마 감옥에 수감 중인 탈북자 한 명을 조만간 서울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5.16)
  - 미얀마에 수감 중인 탈북자는 40대 남성으로 2010년 3월 불법입국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넘게 복역 중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중국, 탈북자 한국행 보장 촉구”

-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 촉구 집회(5.24)에 참석,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즉각 탈북자들을 석방하고 안전한 한국행을 보장하라”고 요구(5.25)

### 〈탈북자 국내 및 국제 정치적 영향력 증대〉

#### 탈북자 가족들, 한국민 증명서 발급 요구

-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자들의 한국 내 가족들이 외교통상부를 찾아 ‘한국인 임시여행증명서(TC)’ 발급을 공식 요청(2.28)
  -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에게 ‘한국인 증명서(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 한국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실상 채택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

#### 탈북 대학생, ‘북한, 지옥탈출 9년’ 프랑스 출간

- 프랑스에서 20대 탈북 여대생 김은선(가명·26)씨의 생생한 북한 탈출기가 프랑스어 판으로 출간(3.7)

#### 영국 부총리, 탈북자 대학생들 면담

-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니콜라스 클레그 영국 부총리가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탈북자 대학생 10여 명을 면담하고 격려(3.27)

## 탈북자 단체장들, 공동행동

- 정치권이 총선에 돌입하면서 탈북단체장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탈북자 출신 조명철 前통일교육원 원장이 여당의 비례대표 4번으로 지명되는데 대한 지지와 성원의 의견을 공동 표명(3.31)

## 난민지위 취득 탈북자, 전 세계 1,052명

- 세계 각지에서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52명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유엔 난민기구(UNHCR) 통계를 인용해 보도(6.20)
  - 국가별 분포를 보면 영국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으로 추산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각지에서 사실상 난민으로 생활하는 탈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
  - 유엔 난민기구(UNHCR)는 또 난민 지위를 받으려고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가 작년 말 현재 490명이라고 보도.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모두 1,542명으로 전년보다 347명이 늘어난 수치

## 국제의원연맹, “경제적 이유 탈북자도 난민 인정”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북한을 떠나는 북한 주민도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한다고 주장(6.22)
  -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란 주제로 제9차 총회를 개최, 공동선언문 발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다변화>

## 포천-예산, ‘탈북자 고용 산업단지’ 조성

-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일하면서 주거까지 해결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고용 산업단지’가 경기 포천시 용정산업단지와 충남 예산군 예당산업단지에 시범적으로 조성(3.8)

### 국회대표단, 총리실 탈북자 부서 설치 요구

-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 여론 확산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를 방문한 국회 대표단은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총리실내 탈북자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을 요구(3.16)

###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규직 채용

- 수원시가 북한이탈주민 A(여·45)씨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고, 시청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부여(3.30)
  - 2009년 6월부터 주당 20시간씩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

### 한국 총선, 첫 탈북자 국회의원 배출

-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배정받은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은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4.12)

### 탈북자 출신 작가 김유경, 첫 소설 발표

- 탈북자 출신 작가 김유경이 소설가 김훈 등 국내 문단의 도움으로 최초로 장편소설 '청춘연가'를 발간(4.13)
  - 소설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 남한에 입국한 뒤 하나원에서 받는 교육,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 등을 묘사

### 탈북단체 대표, 주불 북한대표부 항의 서한

- 탈북자 출신으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김태진 대표는 파리 14구에 소재한 북한총대표부를 방문(4.15), 북한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주장(4.16)
  - 국제앰네스티 프랑치지부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중인 북한총대표부를 찾아 '오길남 박사 가족 구명운동 시민연합' 명의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과 석방을 요구하는 요덕수용소 수감자 중 확인된 254명의 명단을 우편함을 통해 전달

## 중국방문 북한주민 급증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4.24)
  - 중국 관광정책 담당부처인 국가여유국이 23일 공개한 '1분기 외국인 입국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600명보다 40.5%나 증가
  - 올해 1분기 방중한 북한 주민 중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48%)으로 가장 많았고, 회의 참석이나 비즈니스 용무 1만800명(27%), 관광 1천100명 등 순으로 집계

## 전남대, 외국인 유학생 탈북자 인권 지킴이 육성

- '대학과 사회봉사단'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전남대 학생들이 교내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탈북자 인권 지킴이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4.24)
  - 2011년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열어 민간 차원에서 탈북자 인권 지킴이 역할 독려

##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규직 채용

- 경기 용인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채용(4.26)
  - 2010년 11월부터 용인시청 북한이탈주민 고충처리 업무를 보조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용인시청 민원여권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취업알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업무를 부여

## 행안부-기업銀,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지원

-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와 IBK기업은행이 이북도민의 발전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북도민사회 발전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5.29)

## 2. 납북자

### 통일부, 범정부 차원 납북자 대책회의 발족

- 통일부는 1월 20일 납북자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1.20)
  - 납북자 대책위원회는 2011년 12월 26일 발족한 납북자 문제 전담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기구로,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
  - 통일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납북자 대책위원회 정기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차례 열릴 예정

### 일본 납치담당상, 납북자 추가지정

- 일본의 마쓰바라 진 납치 문제 담당상은 한 인터뷰에서 특정 실종자 20명을 '준(準)인정' 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싶다고 주장(2.2)
  - 특정 실종자는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일본인 납북자 17명 이외에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행방불명자를 의미하며 일본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회'가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명단을 작성, 전국적으로 약 470명 추정

### 최원모 씨 납북 사건, 납북 사건 유엔실무그룹 접수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의 부친인 최원모 씨 납북 사건이 납북어부 사건 중 최초로 19일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유엔실무그룹에 접수(3.19)

### 정부, 6·25납북자 120명 추가 인정

-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납북피해자 120명을 4월 9일 추가로 인정(4.9)
  - 6·25전쟁 납북자의 공식적 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272명을 포함해 4월 9일 기준 모두 392명

### 일본 납북피해자 가족들, 캠벨 차관보 면담 후 실망

-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의 가족들은 7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일본 측에 부모에 의한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면담 후 실망감을 표출(5.7)

### 정부, 6·25전쟁 납북자 351명 추가 결정

- 정부는 20일 6·25전쟁 납북자로 351명 추가를 결정. 이에 따라 총 납북자수는 743명(6.20)
  - 납북자로 추가 인정된 인사는 국회의원 김교현 등 정치인 10명, 백운선(당시 동아일보 사진부장) 등 언론인 6명, 최동욱(당시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법조인 6명, 김근호(당시 동양기선 전무이사), 유기태(당시 대한노총 위원장) 등

## 3. 국군포로

### 국방부,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 개소

- 귀환 국군포로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방부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부설기관으로 ‘국군포로정착지원센터’를 개소(3.23)

###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 씨 가족 한국 입국

- 3년 전 베이징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들어갔던 국군포로 고(故) 백종규 씨의 가족을 비롯한 탈북자 5명이 한국에 무사 입국(4.1)
  - 고 백종규 씨의 딸 백영옥(47), 손자 이강민(당시 14세), 손녀 이일심(당시 18세)은 2009년 6월 베이징 총영사관에 들어간 이래 3년간 다른 탈북자 3~4명과 함께 생활

### 국방부, 귀환포로 초청행사 개최

- 국방부는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귀환용사 초청행사’를 개최(5.17)

- 이번 행사는 귀환 국군포로 39명을 비롯해, 동반가족, 김요환 육군참모차장, 국방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전문가 초빙강연, 민속공연 관람 등으로 진행

## 4. 이산가족

### 이산가족 생존자 7만 명대로 줄어

- 이산가족 생존자 수가 최근 1년 사이 8만 명대에서 7만 명대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1,22)
  - 2011년 말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12만8천668명의 이산가족 가운데 생존자는 7만8천892명, 사망자는 4만9천776명을 기록

###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연내 추진

-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정례화를 올해의 주요 목표로 설정(2,6)
  -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보도
  - 또한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에 신변안전,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 해결, 원거리 근로자 수송 등 내실을 다질 것을 보도

### 정부,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액 상향조정

- 정부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조정(2,9)
  - 통일부는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생사확인을 위한 지원액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제3국 상봉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 상봉이나 생사 확인 이후의 교류지속 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을 유지

### 대한적십자 총재, 남북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

- 유종근 대한적십자 총재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포함한 남북 간 인도적 현안을 협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북측 적십자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주장(2.14)

- 상봉행사 시기 관련, 유 총재는 “3월 봄에 상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희망을 담아 전통문을 보냈다”고 주장
- 북측은 당일 전통문을 수용하지 않고, “상부에 알리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이산상봉하려면 공동선언 이행 밝혀야

- 북한은 24일 “이명박 패당이 진정으로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저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북과 남의 온 겨레 앞에 공식 사죄하고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이행할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2.24)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 관련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은) 집권한 후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고 조국통일의 표대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그 이행을 통째로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주장

### 미국, 재미한인-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 계속 추진

- 미국은 재미한인의 북한 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천명(3.29)

### 법무부, 남북 간 가족관계 관련 특례법 시행

- 법무부가 통일을 대비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적 강화 조치를 마련(5.10)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
- 특례법에 따르면 이산가족 중혼에 대한 취소가 제한되며,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

### 통일부, 이산·탈북가족 대북송금 합법화 추진

- 통일부는 6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 개정안에 의하면 이산·탈북 가족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일정 금액 이하의 생계비·의료비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가능(6.11)

## 5. 분석 및 평가

### 탈북자 강제북송금지 활동 확산

- 주한중국대사관 단식농성을 계기로 강제북송으로 인한 탈북자 본인 및 가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됨.
  - 콘서트 개최 등 국내연예인 참여를 통해 젊은 세대 및 일반인 관심 유도
  -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뿐만 아니라, 도의회, 시의회 등 지자체 의회 차원에서도 강제북송 결의안을 채택함.
  - 중국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탈북자에 대한 강제북송이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중국인들의 탈북자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관광객 대상 홍보활동 등도 이루어짐.
  - 미국이외에도 유럽국가 등 해외에서도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확산됨.

### 단속강화로 국내입국 규모 급감

- 김정일 사망이후 북·중국경 단속강화로 인해 탈북자들의 규모가 감소하고, 국내입국자의 규모도 2011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김정은 집권이후 대사령 등을 통해 기존탈북자에서는 처벌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이후 탈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경고함.
  - 국경단속 강화로 탈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중국 내 특별단속으로 인해 탈북이후 국내입국과정에서 위험이 증대됨.
  - 북·중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 탐사기 대대적 배치 및 전파교란 등으로 탈북증개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됨.

- 중국 국경지역에서는 탈북자 신고장치 등을 도입하여 단속 강화
- 2011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한 입국추이는 중국 내 외국인체류 특별단속이 10월 15일까지 설정되어있으며 북한 내 단속강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탈북자 정치적 영향력 강화

-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북한이탈주민을 배정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연초부터 강제북송에 대한 여론 확산 등으로 인해 공동연대활동이 증가된 것에도 기인함.
  - 해외체류 탈북자들도 단체를 결성하여, 탈북자 강제북송 및 북한인권 홍보활동을 강화함.

###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다변화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정착지원의 정책의미를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의 정착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 행정안전부는 지역단위 정착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교부금 배정
  - 경찰청은 지역청별로 건강검진, 청소년교육, 취업지원 등 추진
- 지자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역 내 거주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함.
  - 비정규직 고용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 지자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추가 채용

### 6·25전쟁 납북피해자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 지속

-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총 743명의 납북자수를 확정된 바, 향후 납북피해자 규모 및 실태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산가족 상봉 난항 및 연내 돌파구 마련 노력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난항에 직면한 가운데,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을 중심으로 연내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북미 간 이산가족 교류 지속

- 미국 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사와의 협조를 통해 재미 이산가족의 북한 내 가족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





제7권 1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